

[발표2]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戦後日本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研究史)

카츠오카 칸지(勝岡寛次,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사무국장, 메이세이대학 전후교육사연구센터)

[발표자소개] 히로시마현 태생으로 와세다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메이세이(明星)대학 전후 교육사 연구센터에서 근무했다. 현재 레이타쿠(麗澤)대학 국제문제연구센터 객원교수로 있다. 저서로 '한국·중국 역사교과서를 철저히 비판한다(韓国・中国「歴史教科書」を徹底批判する)'(쇼가쿠칸문고(小学館文庫), 2001), '아베담화와 아사히신문(安倍談話と朝日新聞)'(후타바샤(双葉社), 2015), 공저로 니시오카 쓰토무 편집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2021) 등이 있다.

1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80년대 이후에 일반화되었다

오늘날에는 '강제연행'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 용어는 전시(戰時)에는 없었던 말이다. 따라서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의 근원, 그리고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연행'이란 말이 전시에 사용되었던 '징용'이란 표현을 대체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정대균(鄭大均)에 따르면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이라고 하는데('재일·강제연행의 신화(在日・強制連行の神話)', 분춘신쇼(文春新書), 2004년), 후세에 미친 영향으로 따지면 박경식이 1965년도에 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미래이샤(未來社))이라는 책이 역사인식 문제의 관점에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원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강제연행' 문제를 하나의 운동으로 추진해온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일종의 바이블이자, 오늘날에도 금자탑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해 곧장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인식이 일반화됐던 것은 아니다. 사실 '강제연행'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다. 필자는 아사히신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제연행'이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빈도를 중국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 각각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인 강제연행’이 언론에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임이 밝혀졌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서 나타나는 ‘강제연행’ (중국인(中)·조선인(朝)·위안부(慰))
사용빈도의 경년변화(經年變化) (개략적 숫자)

년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中	1												1	2			1			
朝					1									2	1	8				
慰																				

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中			1			2		3	3	5	23	13	10	21	39	37	15	36	37	46
朝		1	2	4	11	17	23	14	34	66	178	123	98	59	73	109	57	79	76	45
慰			1				1		1	3		24	64	19	10	8	25	56	9	8

합계	296
	1081
	229

한편,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강제연행’론은 주류를 이루지 못했다.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가 지적했듯이, 일본에 온 조선인의 상당수는 타관별이(出稼ぎ)를 하러 왔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일본 내지로 온 것이라는 상식적 견해가 주류였다.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朝鮮人強制連行の歴史)’는 이런 통념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로 나온 것으로, 이로부터 머지않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강제연행파’가 학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에 대해 ‘강제연행’의 학설을 비판하는 문건은 박경식이 ‘강제연행’ 개념을 제기한 1965년 이후, 4반세기 동안 전무했다. ‘강제연행’설에 이의를 제기한 문헌이 나타난 것은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을 비판하는 보수 학자들의 문건은 양적으로 봐도 강제연행 긍정파가 내놓은 문건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이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다. (졸고(拙稿)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 운동사(朝鮮人·中國人「強制連行」運動史)’,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편집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朝鮮人戰時労働の実態)’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2021년)

즉,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에서 비롯된 강제연행 긍정파가 학계의 주류를 차지하는 상황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2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와 ‘재일조선인사연구’

박경식은 1976년에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在日朝鮮人運動史硏究會)’를 조직했고, 이 연구회의 기관지인 ‘재일조선인사연구(在日朝鮮人史硏究)’지는 그를 스승으로 모시는 수많은 연구자를 배출해 왔다. 사도킨산(佐渡金山, 사도금산)의 ‘강제연행’ 문제도 그런 흐름의 일부로 꼽힌다.

쉽게 말해, 니가타 현 내의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문제를 다룬 문헌의 대부분이 ‘재일조선인사연구’지에 발표된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헌이 그렇다.

- 자료 ‘사도광업소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 ‘재일조선인사연구’ 12호, 1983년
- 사토 타이지(佐藤泰治) ‘니가타 현 나카쓰가와 조선인 학살사건(新潟県中津川朝鮮人虐殺事件)’, ‘재일조선인사연구’ 15호, 1985년
- 하시모토 유코(橋澤裕子) ‘니가타 현에서의 조선인 노동운동(新潟県における朝鮮人労働運動)’, ‘재일조선인사연구’ 17호, 1987년
-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 ‘니가타 현과 조선인 강제연행(新潟県と朝鮮人強制連行)’, ‘재일조선인사연구’ 19호, 1989년

이런 문헌들은 모두 (최초에는 일종의 자료들이므로 예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를 수용하여, 그 문제의식을 니가타 현의 역사현상으로 고스란히 끌고 왔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의 ‘니가타 현과 조선인 강제연행’에서는 사도킨잔에 대해 “1942년경까지는 해당 광산이 현 내의 조선인 강제연행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6쪽)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론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연구의 축적이 거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니가타 현에서의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 ‘니가타 현사(新潟県史)’(니가타 현 편집, 1970~)나 각 시·정·촌(한국의 시·읍·면과 비슷함)사(史)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반 연구도 최근 막 시작되어 연구 성과는 미미하다.” (1쪽, 주(2))

1980년대 말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상황이었던 것이다.

3 상황을 일변시킨 ‘니가타 현사(新潟県史)’와 ‘아이카와 마치사(相川町史)’의 ‘강제연행’ 기술

이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니가타 현사(新潟県史)’(통사편(通史編) 8 (근대3), 니가타 현, 1988년)의 기술이다. 거기에는 ‘강제연행된 조선인’(제4장 제2절 5)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조선인 강제연행과 니가타 현(朝鮮人強制連行と新潟県)’이라는 소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고 있다.

“쇼와 10년 (1939년)에 실시된 노무동원계획은, 명칭상으론 ‘모집’, ‘관 알선’, ‘징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한 사실에 있어서는 동질이었다.”(782쪽)

이 항목을 집필한 사람은 사토 야스나리(佐藤泰也)였고(책의 집필자 일람, 878쪽), 사토 야스나리는 박경식을 스승으로 추앙하는 재일조선인사연구회 회원으로, 스승의 ‘조선인 강제연행’설에 의거하여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집, 관 알선, 심지어 일정의 강제성을 지닌 징용조차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강제연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명백한 허위사실이 ‘니가타 현사’라는 공적인 간행물에 실린 것은 큰 문제였지만,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사도킨잔의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의 기점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니가타 현사’에 이어 사도킨잔이 있는 아이카와 마치(町)의 마치사(町史) ‘사도아이카와의 역사(佐渡相川の歴史)’(통사편 근현대, 아이카와 마치, 1995년)도 ‘조선인 노무자의 동원’이라는 소제목에서, 현사(県史)의 기술을 답습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광산에서 일했다. 쇼와 14년에 시작된 노무 동원계획은, 명칭은 모집, 관 알선, 징용으로 변화했으나,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한 사실에 있어서는 동질이었다.”(‘니가타 현사’ 근대편 10)

또한,

“쇼와 17년 1월에 현 내로 연행된 자는 1,708명이었고, 가장 많았던 것이 사도광산의 802명(오자와 유사쿠(小沢有作) 편집 ‘근대 민주의 기록(近代民衆の記録)’, 10 재일조선인)이었다. (중략) 사도광산의 비정상적인 조선인 연행은 전시산금국책(戰時産金國策)으로 시작하여 패전으로 겨우 끝난다.”(679-684쪽)

이처럼 아이카와 마치사는 ‘니가타 현사’를 답습하고, ‘니가타 현사’는 박경식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기에 박경식의 책, ‘니가타 현사’, 그리고 ‘아이카와 마치사’는 일련탁생(一蓮托生, 운명공동체)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강제연행’파도 인정한 박경식의 실수

한편,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는 ‘강제연행’파 사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박경식의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하는 김영달(金英達)은 강제연행이란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강제연행’은 그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람에 따라 제각각으로 해석하여 받아 들여지고 있다. (중략) 그 실질이나 정도에 대해 공통 이해가 확

립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이라는 말만 홀로 나아가며, 마치 특정 시대의 특정 역사현상을 가리키는 역사용어인 것처럼 쓰이고 있는 데에 혼란의 원인이 있다.

따라서,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각각 미리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단, 이럴 경우에, 조선인의 일본 도항은 일제히 ‘강제연행’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만이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일본인까지 포함해 법적 강제력에 의해 전쟁에 동원된 사람은 모두 ‘강제연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마 백가쟁명 상태가 되어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필자의 제안은, 전쟁 중 조선인에 대한 강제적인 전쟁동원에 대해서는 총칭으로 ‘전시동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전시동원 중 구체적인 현상의 하나인 폭력적인 동원에 대해서는 ‘강제연행’이라고 개념을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김영달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연구(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김영달 저작집 II, 아카시서점(明石書店), 45-46쪽)

이처럼 김영달은 박영식이 처음 사용하면서 퍼뜨린 ‘강제연행’의 개념이 모호하며, 여러 가지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전시동원이라는 말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영달이 일찍이 운명(殞命)한 것도 있어, ‘강제연행’을 둘러싼 논의는 오늘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니가타 현사’나 ‘아이카와 마치사’가 모집, 관 알선, 징용을 일제히 “조선인을 강제적으로 연행한 사실에 있어서는 동질”로 인정한 것이 혼란을 더욱 부추긴 가장 큰 예로 꼽힌다.

5 국민 공동으로 ‘역사의 사실’을 밝히고 싶다

박경식의 학설을 1990년대의 운동 차원에서 지지한 단체가 바로 ‘조선인 및 중국인 강제연행, 강제노동을 생각하는 전국 국민집회(朝鮮人·中国人強制連行・強制労働を考える全国国民集会)’였다. 2005년 이후에는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공동대표 안자코 유카(庵途由香), 히다 유이치(飛田雄一))가 그 역할을 맡았고, 이들은 사도킨잔 문제에 관해 한국과 밀접하게 제휴하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2월 16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강행에 대한 대응과 전망’이라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첫 번째 발제자는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의 사무국 차장인 고바야시 히사모토(小林久公)였다.

고바야시 히사모토는 ‘사도광산 세계유산등록에 관한 취지와 경과, 최근의 움직임 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발표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현재의 기시다 총리대신도 아베 씨와 마찬가지로 가슴에 푸른 배지를 달고 있지만, 그 역사인식, 가치관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허구를 사실로 조작해 자기만족만 할 뿐이다. 이 가치관은 ‘인류 전체를 위한’ 유산이라는 세계유산의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것이며, 세계유산을 자신의 유산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북조선에 의한 납치자 구출을 잊지 않겠다는 상징인 푸른 배지를 일본 총리가 가슴에 단 것을 두고, “그 역사인식, 가치관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허구를 사실로 날조해 자기만족만 할 뿐”이라며 서슴없이 단언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허구를 사실로 날조하고 있는” 쪽은 과연 어느 쪽인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는 1월 25일에 긴급 성명도 발표했고, 거기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사도광산(사도섬의 킨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2년 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사도의 킨잔에 대한 한국 측의 독자적인 주장에 대해 일본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기하라(木原) 관방부장관)라고 밝혔고, 일본은 지난해 말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주장인 전시 조선인 강제노동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중략) 일본의 총력전 체제하, 전시노무동원 정책에 따라 조선반도에서 일본으로 약 80만 명이 강제동원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도광산이 강제노동의 현장이었다는 한국 측 주장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독자적인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세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강제노동의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 측의 비판을 문제 삼는 듯한 대응은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강제노동의 진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사실이란 박경식이 반세기 전에 펴낸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를 금과옥조처럼 휘두를 뿐인, 실은 역사적 사실의 뒷받침이 전혀 없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날 한국의 학자들로부터도 이론(異論)이 분출되고 있으며, 그들은 일부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강제연행’설, ‘강제노동’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반일종족주의’,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금일도 한국 발표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의 반론이 있다고 들어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무엇이 역사의 사실인지를 판가름하고, 한국 측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은 관민이 일체가 되어 역사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에 있어 우리의 주장에 동의해 주시는 한국분들까지 계셔서 정말 마음이 든든해진다.

함께 손을 잡고, 역사의 사실을 밝혀 나가고 싶다.